

中國式 市場社會主義의 實現展望에 관한 研究*

金 時 中**

논 문 초 록 :

본 논문은 중국 체제개혁의 목표모형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Lange 이래 여러 학자들이 제기해 온 시장사회주의의 범주에 속하는지 검토하고, 개혁기 중국 경제가 이 목표모형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중국식 시장사회주의의 구성요소로 제시된 시장화, 공유중심의 소유제, 분배평등성, 정부 개입 등 네 측면에서 중국 경제의 변화방향을 분석하여 향후 중국의 경제체제가 현재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유형의 시장사회주의로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논증하였다. 이는 중국이 시장사회주의의 실현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핵심주제어 : 시장사회주의, 중국 경제, 체제개혁 모형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 P4

I. 序 論

1980년대 말 이후 대부분의 현실 사회주의 경제가 몰락하면서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었고, 유일한 현실적 대안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불가피성을 수용하는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소득·부·기회의 불평등이나 외부성, 정보의 비대칭성 등에 따른 시장실패와 같은 내재적 문제점이 존재하는 한,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의 모색은 계속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도 대안의 하나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새로운 경제체제를 모색하는 데는 이론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 이 연구는 1996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본 논문의 수정을 위해 유익한 논평을 해 준 익명의 논평자들에게 감사드린다.

**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드러난 바 있는 市場經濟의 效率性을 상당 부분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주의의 이념과 시장기구의 효율성을 결합하고자 하는 市場社會主義(market socialism)가 이론적·현실적 대안으로 모색될 수 있다고 하겠다.

시장사회주의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1930-1940년대 Mises, Lange, Hayek 등에 의한 이른바 經濟計算論爭 이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현실 사회주의가 몰락한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Le Grand and Estrin, 1989; Bardhan and Roemer, 1992; Roemer, 1993; 조원희, 1997). 또한 시장사회주의의 현실적 실현이 추구되기도 하는데, 일부 유럽 국가의 일부 정당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시장사회주의로 전환하는 것을 모색하거나 일부 구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체제 전환과정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시장화에 초점을 둔 경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중국이 시장사회주의의 성립가능성을 시사해 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체제개혁 모형과 실제 경제적 변화를 분석하여 중국이 시장사회주의의 성립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절에서 시장사회주의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정리한다. 제Ⅲ절에서는 중국이 개혁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모형을 분석하여 그 성격을 구명한다. 제Ⅳ절에서는 개혁기의 중국경제가 그들이 내세우는 목표모형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어서 제Ⅴ절에서는 위 논의에 기초하여 향후 중국의 경제체제 변화방향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국 경제체제 개혁의 성격을 구명하는 동시에 제한적이거나 시장사회주의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는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Ⅱ. 市場社會主義의 模型

시장사회주의에 관한 논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아직 시장사회주의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의된 개념에 도달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시장사회주의의 핵심 아이디어는 平等이라는 사회주의적 목표와 시장기구에 기초한 效率性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방향하에서 시장사회주의는 生産手段, 곧 資本의 公有(public ownership)를 근간으로 하되, 競爭的 市場(competitive

market)을 통한 자원배분이 중심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즉, 전통적인 경제체제론에서 資本主義를 구성하는 불가분의 요소로 여겨졌던 生産手段의 私有와 市場機構를 분리시켜, 廣의의 公有制과 市場機構의 결합을 모색하는 것이라 하겠다.

1. 傳統的 市場社會主義 모형

시장사회주의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이미 20세기 초반에 시작되었다. 당시의 시장사회주의 모형은 국가가 복잡한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식으로 모든 시장을 균형시키는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는 Barone(1908)의 주장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러나 Mises(1920) 등은 국가가 수많은 시장의 균형가격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즉 복잡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보유하지 못한다는 것을 근거로 위 주장을 논박하였다. 그러나 다시 Lange(1938)는 일부 부문에 실제 시장을 도입하고 또한 부분적으로 국가가 시장역할을 모방함으로써 제한된 정보하에서도 사회주의적 시장균형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논증함으로써 이 논쟁에 신기원을 마련하였다.

시장사회주의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Lange모형은 생산수단의 공유를 전제로 하고, 공유기업 경영자가 이윤극대화와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될 지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¹⁾ 그리고 소비재시장과 노동시장을 허용하여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격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이들 자원이 배분되도록 한다. 그러나 생산재에 대해서는 실제의 시장을 대신하여 국가(곧 중앙계획기구)가 마치 왈라스식 경매자와 같이 모색과정(tâtonnement process)을 통해 가상가격을 계속 조정함으로써 균형가격에 도달하며,²⁾ 또한 국가가 목표축적률을 달성하도록 하는 균형이자율의 설정을 상정한다. 이 모형이 상정하는 경제는 분배의 평등을 달성하는 동시에 일반경쟁균형하에서 마찬가지로 파레토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이 증명된다. 특히 이 모형은 Mises 등이 제기한 바, 사회주의 경제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중앙계획기구가 무한한 정보에 기초하여 복잡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한다는 비판을 효과적으로 반박한 것

1) 기업경영자는 평균비용을 최소화하고(제1규칙), 한계비용을 가격과 일치시키도록(제2규칙) 생산량과 생산방법을 선택하라는 지침을 받아 이를 준수한다고 가정된다.

2) 중앙계획기구가 어떤 가격을 제시하여 각 생산자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보고받은 후 초과수요가 있는 재화가격을 인상하고 초과공급이 존재하는 재화가격은 인하하는 방식으로 계속 가격벡터를 조정하여 균형에 도달하는 과정을 상정하는 것이다.

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Lange의 시장사회주의 모형에 대하여 다양한 비판이 나타난 바 있다. Hayek(1940) 등에 의한 전통적 비판은 중앙계획기구에 의한 모색과정의 收斂(convergence)에 대한 회의, 재화(특히 생산재)의 비표준성에 따른 재화 및 가격 개념정의의 어려움과 개별 경제주체 보유정보의 주관성(tacitness)에 기인한 정보전달의 어려움 등에 기인한 국가에 의한 시장기능 모방의 한계, 기업경영자들의 규칙준수 가정의 비현실성 등과 같은 이 모형의 현실성 결여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또한 현대경제학의 발달과 더불어 Lange모형에 대하여 새로운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그 핵심은 국민과 국가 간의, 또한 국가와 기업경영자 간의 주인-대리인문제(principal-agent problem)라고 할 수 있다. 즉, 공유기업의 명목상 소유자인 국민과 그 대리인으로서 기업관리를 책임지는 정부 간에, 또한 정부와 실제 경영을 담당하는 경영자 간에 존재하는 비대칭적 정보, 이해관계의 불일치 및 이를 조화시킬 수 있는 유인체계의 부재(incentive incompatibility)에 따른 비효율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사회주의하 공유기업의 軟性豫算制約(soft budget constraint)의 문제도³⁾ 근본적으로 이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⁴⁾

2. 새로운 市場社會主義의 모형

위와 같은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시장사회주의의 모형도 점차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새로운 모형들은 시장사회주의의 기본정신을 유지하되 위에서 제시된 문제점들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한 것들인데, 이들 모형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市場機能 도입의 확대

새로운 시장사회주의 모형들은 시장역할을 보다 광범위하게 도입한다. 고도의 분업을 전제로 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복잡한 자원배분기능과 革新(innovation)

3) Kornai가 제시한 이 개념은 사회주의 경제에서 국가가 보조금, 조세, 금융, 가격 등의 측면에서 기업에 각종 혜택을 제공할 것이 사전적으로 기대됨으로써 기업경영이 필연적으로 방만해지고 그 실패에 대해 기업이 책임을 지지 않는 현상을 묘사한 것이다.

4) 연성예산제약이 대리인문제로 전부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정보비대칭성에 기초한 대리인문제 외에도 가부장적 역할을 부여받은 국가가 기업의 퇴출을 방관하기 어렵다는 정치적 문제도 작용한다.

을 통한 경제발전의 기능은 競爭的 市場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또한 경험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시장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중앙계획기구는 경제주체들 간의 정보전달(information processing) 및 경제주체에 대한 유인(incentive)제공기능이 크게 미흡하고⁵⁾ 관료주의의 만연이 불가피하여, 靜態的인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함은 물론 動態的인 革新에도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한편 外部性, 규모의 경제로 인한 자연독점, 불확실성의 존재와 완전한 선물시장존재의 현실적 불가능, 정보의 비대칭성 등 市場失敗의 요소가 적지 않게 존재하지만, 이들 문제가 전반적인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압도할 만큼 크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새로운 시장사회주의 모형은 주된 자원배분기구로서 시장을 선택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시장역할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창자들 사이에 이견이 존재한다. Lange의 원래 모형에서는 消費財市場과 勞動市場을 허용하되, 생산재에 대해서는 국가가 모색과정을 통해 가격을 조정해 균형에 도달하며, 또한 국가가 이자율을 설정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그러나 이 모형에 대한 논쟁과정에서 生産財市場을 허용하더라도 Lange식 시장사회주의의 성립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오늘날의 시장사회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상품과 대부분 생산요소의 시장배분을 도입한다. 다만 불확실성 하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연쇄적 파급효과가 크며 또한 생산수단의 소유제도와 밀접히 관련된 資本市場에 대해서는 대체로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다.

또한 시장사회주의자들은 외부성, 공공재, 정보비대칭성 등의 시장실패요인을 보다 넓게 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의 경우 그 공공재성격 및 비대칭적 정보문제에 유의하여, 그 공급을 전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것에 유보적이다. 그러나 이들 광의의 공공재인 경우에도 공적 기관에 의한 공급이 초래하는 비효율성을 감안하여, 구매증서(voucher) 발행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공급자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급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시장프로그램까지 수용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Le Grand and Estrin, 1989, pp.72-73, pp.198-204).

한편, 시장사회주의는 시장을 대체하는 차원이 아닌, 시장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일정한 計劃機能을 갖는다. 특히 불확실성하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의 총규모와

5) 각 경제주체들은 중앙계획당국에 자신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동기도, 중앙계획당국이 할당한 계획목표를 그대로 수행할 동기도 갖지 않는다.

구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것에 유보적이다. 즉, 완전한 상황조건 부 시장(contingent market)이나 효과적인 선물·보험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또한 한 부문의 투자가 타부문에 대해 외부효과를 갖는 상황에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투자배분이 효율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또한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중복투자를 배제하기 위해서도 투자 결정에 정부가 일정한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誘導性 計劃(indicative planning)이라는 명목으로 기존 공급자, 경쟁자, 구매자 및 정부의 장기계획에 대한 정보를 통합(pooling)하여 제공함으로써 각 경제주체들이 이를 기초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축소시켜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한다.⁶⁾ 또한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는 차별적 이자율적용 등의 수단으로 정부가 산업별로 투자조건에 차이를 두어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産業政策 또는 戰略的 計劃의 실시를 용인하기도 한다.

(2) 所有制度에 대한 입장변화

새로운 시장사회주의 모형은 생산수단의 소유제도와 관련해서도 전통적 모형과 다른 입장을 취한다. 현대의 시장사회주의자들도 자본주의체제의 핵심적 문제인 소득과 부의 불평등 및 이로 말미암는 기회불평등의 근본원인이 생산수단, 곧 자본의 소유집중 또는 사적 소유 자체에 있다고 보고 이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이들은 국가의 실질적 지배(control)하에 있는 전통적 公有企業이 갖는 비효율성의 문제를 깊이 우려한다. 이미 지적한 대로 사회주의하의 공유기업은 대리인 문제에 따른 유인체계의 부재, 시장경쟁의 부재, 기업에 대한 정치적 개입 등으로 인한 기업경영의 비효율, 곧 연성예산제약의 문제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로운 시장사회주의 모형은 이 문제에 대응하여 혁신적 기업가(entrepreneur) 활동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私企業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허용한다. 그러나 사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할 경우에는 순수한 사유를 배제하고 광의의 公有로 전환하되, 경쟁적 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상정한다.⁷⁾ 여기서 말하는 광의의 公有制은 정부에 의한 기업지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통

6) 이 유도성 계획은 실행단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전통적인 사회주의 경제에서의 중앙계획과 구별된다.

7) 자본주의 경제에서도 협의의 사기업들은 시장경쟁과정에서 도태되거나, 성장하여 스스로 주식회사화하거나 다른 대기업(주식회사)에 의해 매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적인 사회주의 공유제와 구별된다. 즉, 소유(ownership)와 지배(control)의 분리 차원에서 정부조직이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간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메카니즘을 고안한다. 이는 현대자본주의에서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주식회사의 형태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현대자본주의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경영자의 부실경영 가능성, 곧 대리인문제를 해결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경영자 노동시장이 감독(monitoring)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즉, 기업경영이 부실해지면 효율적인 자본시장에서 주가가격이 하락하고, 곧 이 기업은 외부로부터 인수합병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이 경우 경영자 개인의 봉급수준이 하락하거나 다른 경영자로 대체되는 시장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본시장 및 경영자 노동시장이 경영자의 나태나 비효율적 의사결정을 방지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새로운 시장사회주의 모형들도 대리인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우선 경영자 노동시장의 도입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다만 자본시장은 소유제와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이를 도입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이를 대체하는 경영자감독 메커니즘을 고안한다. Bardahn and Roemer(1992)모형은 먼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인 경우 사적 소유를 배제하되 국가가 직접 소유하지 않고 일종의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들 주식회사의 구체적인 소유 및 감독방식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유형을 제시한다.

첫째 유형은 기업의 종업원, 일단의 관련 계열기업, 이들 계열기업의 주거래은행 및 기타 기관투자자들이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주거래은행이 해당 기업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⁸⁾ 이 때 주거래은행은 출자자 및 채권자들의 위임을 받아, 해당 기업경영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대출 조건을 재조정하거나 경영자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감독권을 행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기간 직접 경영을 맡을 수도 있다. 이 유형은 독일이나 일본의 모형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각 기업의 내부정보를 보유한 주거래은행이 기업에 대한 감독권을 위임받아 행사함으로써 대리인문제에 대응하도록 하는 형태이다.⁹⁾

8) 모든 은행은 국가가 지배지분을 보유하도록 하며, 각 은행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계열 기업들에게 대출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한 위험분산 차원에서 타은행 계열기업들에게도 대출을 제공한다.

9) 은행중심의 감독체제는 기업경영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시각을 보유함으로써 기업의 단기 이윤극대화 또는 주가극대화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 유형은 자본시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경제에 적절한 방식으로 제시된다.¹⁰⁾

둘째 유형은 모든 성인국민에게 모든 공기업이윤에 대한 동일한 청구권을 갖도록 증서(coupon)를 교부하는 방식으로서, 쿠폰경제라고 한다. 이 쿠폰경제는 일단 모든 공기업들의 지분을 동일하게 보유한 다수의 投資基金(mutual fund)을 설립하고, 모든 성인들에게는 각 투자기금수익의 1인당 몫에 대한 청구권을 부여하는 일정량의 증서를 교부하는데, 이 증서는 독자적인 단위로 평가되는 것이다. 이후 각 투자기금은 공기업들의 경영상태를 평가하여 그 지분보유를 변경시켜가며, 또한 각 개인은 각 투자기금들의 투자상황(portfolio)을 보아가며 투자기금에 대한 주식보유를 변경시켜 가도록 한다. 단, 이 주식거래는 모두 증서로 이루어지며 주식가격 역시 증서단위로 표시된다. 이 때 증서단위로 표시된 株價는 각 기업 및 투자기금의 성과를 반영하는 지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증서의 현금매각이나 현금을 사용한 주식·증서거래를 금지하여, 소수인에게 주식 또는 증서가 집중되는 것을 배제하도록 한다.¹¹⁾ 이와 같은 특수한 형태의 자본시장은¹²⁾ 기업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과도한 분배불평등 억제역할을 한다.

위와 같은 公有制는 所有權(ownership)의 개념이 포괄하는 일련의 권리, 즉 해당 자산에 대한 使用權, 收益權, 處分權을 분리하여 이를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배분하는 성격을 갖는다. 즉, 공유기업의 경영권 곧 기업자산의 사용권은 경영자에게 귀속시키고, 명목적 소유자인 국민에게는 수익권을 기본적으로 균등하게 분배되되 처분권은 제한적으로만 부여하는 방식이다. 동시에 은행, 투자기금 또는 특수한 자본시장에게 대리인으로서의 기업경영자가 소유자의 이해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못하게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대리인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위의 모형외에 '노동자소유-경영기업(labor-owned, labor-managed firm)'을 시장사회주의의 근간으로 보는 또 다른 모형이 존재한다. 이 모형의 핵

10) 자본시장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정치적·경제적 기초질서(infrastructure)가 필요하지만, 이는 서양 자본주의 국가에서 오랜 역사의 산물로 정착된 것으로서 다른 국가들이 단기간 내에 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1) 단, 개인이 이 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 곧 이 증서가 담고 있는 미래의 배당소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허용한다. 증서의 현금매각을 허용할 경우 대부분의 시민은 높은 시간 선호율과 위험기피도 및 주식거래의 미숙 같은 이유로 곧 증서를 매각할 것이다.

12) 이 모형에서 기업에 대한 실제 자금공급은 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 특수한 자본시장은 기업이윤에 대한 재산권배분역할만을 수행한다.

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종업원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는 생산협동조합(producer cooperative)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생산수단의 사유 및 자본에 의한 노동고용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불평등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라 발생하는 대리인문제를 완화하는 대안으로서, 내부정보를 보유하고 경영효율성 향상에 직접적인 유인을 갖는 종업원이 집단적으로 기업을 소유하고,¹³⁾ 민주적으로 경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업원 소유기업의 문제점으로서 종업원 평균소득 극대화추구의 결과 나타나는 시장실패에 대한 둔감성, 진입과 퇴출의 어려움, 종업원의 과도한 위험부담과 고려기간(time horizon)의 단기성에 기인한 과소투자의 경향 등이 이론적으로 또한 실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들 문제에 대한 논박 또는 이를 완화하는 차원에서의 이 모형의 여러 변형들이 제시되고 있지만,¹⁴⁾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위의 논의를 정리하면 시장사회주의는 시장기능을 광범위하게 도입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되, 자본의 사적 소유를 제한하는 다양한 공유제형식을 도입하여 분배의 평등을 도모하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사회주의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적·현실적 논쟁이 나타나고 있지만,¹⁵⁾ 이에 대한 논의 역시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다루지 않기로 한다.

Ⅲ. 中國 社會主義市場經濟의 特性

1978년 말 이래 개혁을 실시해 온 중국은 1992년 9월의 제14기 전국공산당대회에 이르러서야 ‘社會主義 市場經濟’를 공식적인 목표모형으로 채택하였다. 그 이전에 중국은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기본방향하에서 ‘계획적 상품경제’, ‘계획과 시장조절의 유기적 결합’, ‘국가가 시장을 조절하고 시장이 기업을 유도하는 메커니즘’ 등의 표현으로 그들의 개혁모형을 묘사하면서, 시장경제의 수용을 배제한 바 있었다. 그러나 1992년 초 鄧小平이 南巡講話를 통하여 “계획경제가 사회주의와 동일시될 수 없으며, 시장경제 또한 자본주의 고유제도가 아닌 하나

13) 이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노동이 자본을 고용하는 방식이다.

14)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Estrin(1989), 조영철(1997), 조원희(1997) 등.

15) 이 논쟁에 관해서는 Le Grand and Estrin(1989), Bardhan and Roemer(1992, 1993), Shleifer and Vishny(1994), 조원희(1997) 등 참조.

의 경제수단으로서 사회주의와 양립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한 데에 기초하여, 마침내 제14기 전국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개혁목표로 채택하게 된 것이다.

이후 중국은 中共中央 제14기 3中全會(1993년 11월)에서 채택된 ‘中共中央의 社會主義 市場經濟 건설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決定’(이하 ‘결정’)을 통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기본틀을 공식적으로 제시하였다.¹⁶⁾ 이 ‘결정’에 따르면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국가의 거시적 통제하에서 시장이 자원배분에 대해 기본적인 작용을 하는 경제”이다. 이 ‘결정’은 보다 구체적으로 “公有制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유제 경제요소의 공동발전 도모”, “국유기업의 경영메커니즘 전환을 통한 시장경제의 요구에 적응, 이를 위한 재산권의 명확화,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정부와 기업의 기능분리, 과학적 관리를 시행하는 현대기업제도의 건립”, “개방된 전국의 통일적 시장건설”, “노동에 따른 분배를 중심으로 효율을 우선하되 공평한 분배를 추구함으로써 일부의 우선적 부유화를 거친 공동부유의 도모” 등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적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위 ‘결정’이 제시한 틀하에서 중국의 여러 학자나 기관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모형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馬洪, 1993; 中國社會科學院, 1996; Yang *et. al.*, 1996 등 참조).

먼저 중국이 제시하는 사회주의시장경제는 자원배분의 기본기능을 시장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시장경제와 동일하다. 즉, 소비재는 물론 농산물, 생산재 등 모든 재화와 노동, 자본, 토지(사용권) 등의 생산요소도 기본적으로 시장을 통하여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즉, 과거와 같이 정부가 이들 자원의 배분을 결정하고 가격을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희소성을 반영하는 가격이 결정되고 이를 매개로 수급이 조정되는 방식으로 자원이 배분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유기업을 포함하는 다양한 소유제의 기업들이 시장경쟁을 통하여 成敗가 결정되도록 하겠다는 점도 일반적인 시장경제와 동일하다.

그러나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사회주의’라는 수식어가 의미하듯이 여러 측면에서 일반적인 시장경제와는 구별되는 사회주의적 특성을 보유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선 이른바 ‘4항 기본원칙’이라는 국가기본방침을 통하여,¹⁷⁾ 기

16) 이 ‘결정’의 원문 및 번역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3) 참조.

17) 4항 기본원칙이란 사회주의 노선의 견지, 인민민주주의 독재견지, 중국공산당 영도의 견지,

존 중국공산당의 통치를 가장 기본적인 사회주의 요소로 간주하는 정치적 측면이 존재한다. 즉, 경제개혁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현정치체제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중국식 사회주의의 기본요소이다. 또한 이러한 정치적 요소 외에도 경제적 측면, 즉 경제체제의 측면에서도 사회주의적 요소는 분명히 제시되고 있다.

첫째로 생산수단 소유제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公有制가 중심이 되고, 일부 전략업종에서는 國有制가 중심이 된다는 것을 사회주의의 핵심요소로 들고 있다. 즉, 중국이 사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등 다양한 소유제의 기업을 허용하고 특정 지역 또는 업종에서는 비공유기업의 주도적 역할도 용인하지만, 경제 전반에서는 公有部門이 중심적 역할을 하며 일부 업종에서는 國有企業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公有部門은 國有企業¹⁸⁾과 集體所有制 企業¹⁹⁾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지만, 개혁의 진전과정에서 그 범위가 모호해짐에 따라 해석이 보다 유연해지고 있다. 즉, 20년 가까운 개혁의 진전과정에서 새로운 종류의 혼합적 소유 방식들이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공유제 개념의 해석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새로이 公有制에 포함되는 요소로서는 여러 공유제 주체가 공동출자한 기업이나 국가가 支配持分을 보유한 株式制 企業 등을 들고 있다(馬洪, 1993, pp. 7-8). 한편 군수, 에너지, 통신, 철강, 은행 등 전략 업종에서는 국유기업이 중심적 비중을 차지한다는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결국 개념해석이 보다 유연해지고 또한 비공유기업의 역할을 일정하게 인정하기는 하지만, 공유기업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 중국식 사회주의의 핵심요소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공유기업, 특히 국유기업이 개혁 이전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 점을 강조한다. 즉, 국유기업이 과거와 같이 경영의 독립성을 상실한 말단 행정기관적 성격을 탈피하여, 독립법인으로서 자주경영과 손익자기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기업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현대기업제도의 건립’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개혁의 핵심은 기업자산의 소유권은 국가가 보유하되, 기업은 법인재산권을 보유한 주체로서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권한과 이에 따른 책임을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의 견지의 네 가지를 확고한 원칙으로 삼는다는 것인데, 그 핵심은 결국 공산당 권력의 유지에 있다고 해석된다.

18) 중국에서 전인민소유제라 했으며, 명목적으로는 전국민이 소유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마치 정부의 주관부문이 소유한 것처럼 운영되었던 기업을 말한다.

19) 명목적으로는 해당 단위의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는(joint and indivisible ownership) 기업을 말하지만, 중국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말단 지방정부에서 통제한다.

부여받는 것이다. 이 때 기업이 행사하는 법인재산권의 내용으로 사용권을 물론 일정 한도 내의 자산처분권도 포함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결국 국유기업의 주식회사화(corporatization)를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아직도 국유기업의 전반적인 私有化(privatization)는 중국의 개혁의제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다만 “큰 것은 장악하되, 작은 것은 풀어놓는다(抓大放小)”는 원칙하에 중소형 국유기업에 대해 합병, 매각, 임대경영, 파산 등의 방식을 도입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여 실질적 사유화의 길을 열어 놓고 있다.

두 번째의 사회주의 요소로서 중국은 共同富裕의 목표, 즉 平等과 양립하는 성장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노동에 따른 분배(按勞分配)’를 중심으로 하되 자본수익 등 각종 비노동수입도 허용한다는 원칙하에서 과거에 비해 효율성을 중시하는 분배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종래의 극단적 평균주의를 탈피하여 생산성 제고의 유인을 제공하는 의미에서 일부 개인이나 지방이 먼저 부유해지는 것을 장려한다는 ‘先富論’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생산수단의 공유가 중심이 되는 상황에서는 자산소득이 제한되어 분배의 양극화현상이 억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과 궁극적인 목표는 공동부유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중국공산당의 세력기반인 도시노동자의 불만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장화개혁 과정에서도 고용보장 및 주거, 의료, 식량 등의 염가공급 보장을 매우 신중하게 조정해 간다는 입장이다.²⁰⁾

셋째로, 시장이 기본적인 자원배분기능을 수행하지만 이는 국가의 ‘거시적 통제’(중국식 표현은 宏觀調控)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전제를 달고 있다. 중국에서 말하는 국가의 거시적 통제는 일반적인 시장경제에서의 거시경제정책, 즉 경제안정을 추구하는 재정·금융정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광의의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개입을 총칭한다고 하겠다. 특히 중국 정부는 거시적 통제명목으로 재정·금융정책은 물론 소득정책, 산업정책, 지역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임금총액, 대출총액, 투자총액과 이들의 업종별·지역별 할당에 대해 일정 정도 간여하고 있는 상황이다.²¹⁾ 한편 중국은 거시적 통제의 한 수단으로서 또한 앞에서 제시한 부문별 정책을 종합하는 성격을 갖는 經濟計劃을 작성하여 실시

20) 중국에서도 下崗이라는 고용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下崗人員에 대해서도 해당 기업이 기본급을 계속 지급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새로운 취업기회도 찾아 주는 것이 원칙이다.

21) 1993년 이후 중국에서 강조되고 있는 거시적 통제내용은 지방정부들의 과도한 투자와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긴축정책의 성격을 갖는다.

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에서도 법률적·경제적 수단을 사용한 간접적 개입은 물론 행정적·정치적 수단 등을 동원한 직접개입의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시적 통제는 개혁의 진전과정에서 지방정부의 권한이 확대된 결과 나타난 과도한 투자를 중앙정부가 적절히 관리하려는 동기도 작용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볼 때, 중국의 개혁모형은 시장을 광범위하게 도입하되, 公有企業을 중심으로 하고, 과도한 분배의 불평등을 배제하며, 또한 일정 수준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²²⁾ 결국 이러한 내용을 갖는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모형은 앞에서 살펴본 시장사회주의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앞에서 살펴본 새로운 시장사회주의 모형들이 자본주의의 불평등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과는 달리 사회주의의 비효율성 극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등장배경을 달리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진정한 시장사회주의에 목표를 둔 것이기라기보다, 지도부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의 타협결과로 등장한 일종의 과도기적 모형일 뿐이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Putterman, 1995, p.1061). 다만, 중국이 제시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모형의 내용이 시장사회주의의 범주에 속한다는 관찰은 충분한 근거를 갖는 것이라 하겠다.

IV. 中國經濟의 變化基調: 社會主義市場經濟의 구성요소 측면에서

중국은 1978년 12월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한 이후 지난 20년 가까이 연평균 9% 이상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고, 수출증가율, 외자유치 등의 측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어 왔다. 소매물가상승률이 다소 높은 연평균 7%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고성장 개도국과 비교할 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즉, 거시경제지표를 통해 볼 때 중국경제의 성과는 괄목할 만 하며, 이는 체제전환 과정에서 큰 진통을 겪고 있는 동유럽 및 러시아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중국 경제의 성과에 대하여 일부 학자들은 개혁의 초기조건으로서의 중국의 경제구조가 고속성장에 유리한 여건을 제공한 결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²³⁾ 이

22) 다만 1998년 朱鎔基 총리 등장 이후 국유기업 개혁, 주택상품화 개혁 등의 가속화를 강조하면서 공식적으로도 사회주의적 요소가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요인으로 20년 가까운 중국 경제의 높은 성과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결국 Naughton(1995) 등이 주장하듯이 점진성, 실험성, 사유화에 우선하는 시장화 등의 특징을 갖는 중국의 체제개혁방식이 적어도 지금까지는 성공을 거두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의 독특한 체제개혁방식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관찰의 연장선상에서, 중국이 향후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독특한 경제체제로 귀착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본장에서는 이에 답을 찾는 차원에서 개혁기의 중국 경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것으로 제시된 시장화, 공유중심의 소유제, 분배의평등성, 정부개입 등 네 측면에서의 변화를 분석해 본다.

1. 市場化의 進展

중국은 1978년 이래 점진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계획기능을 축소하고 시장기능을 확대하는 개혁을 실시해 왔다. 경제개혁의 초기 단계에는 指令性 計劃을 축소하면서 指導性 計劃과 市場을 통한 자원배분을 확대하였고, 이후에는 점차 지도성 계획도 시장으로 대체해 왔다. 1980년대에는 계획대상 품목수를 축소하는 동시에, 계획대상 품목에 대해서도 계획할당량을 초과하는 생산에 대해서는 시장을 통해 원자재구매와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二重體制(중국식 표현은 雙軌制)를 형성하였다. 이후 중국은 점차로 계획가격을 시장가격으로 접근시키거나 가격을 자유화함으로써 二重體制를 단일 市場體制에 접근시켜 왔다. 이러한 점진적 시장화방식은 이중가격의 존재에 따라 구조적으로 지대추구(rent-seeking) 기회를 제공한다는 문제가 있지만, 시장가격이 기업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한계가격(marginal price)으로 작용하였고, 또한 시장가격을 참고로 계획가격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을 가지며 효과적으로 실시되어 왔다고 평가된다.

시장을 통한 배분은 초기에 농산물과 소비재에서 시작되어 점차 생산재로 확산되었다. 이와 같이 중국 경제의 자원배분체제가 급속히 시장화(marketize)되고 있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 주고 있는 것은 품목별로 적용되는 다중가격체제 내에

23) Sachs and Woo(1994) 등은 높은 농촌인구비율, 상대적으로 낮은 국유기업비중 등 개혁의 초기 조건이 개혁기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을 달성한 주요인이라고 해석한다.

〈표 1〉 중국 가격구조의 변화추이

(단위: %)

	연도	국가지정가격	국가지도가격	시장가격
농부산물	1985	37.0	23.0	40.0
	1990	25.0	23.4	51.6
	1993	10.4	2.1	87.5
소 비 재	1985	47.0	19.0	34.0
	1990	29.8	17.2	53.0
	1993	4.8	1.4	93.8
생 산 재	1985	n/a	n/a	n/a
	1990	44.6	19.0	43.8
	1993	13.8	5.1	81.1

자료: 고정식(1997), p.118, 121, 123의 표에서 재인용.

서의 변화추이 이다. 개혁 이전에는 시장가격을 통해 거래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였으나, 1980년대에 꾸준히 상승하였고, 특히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상승하여 1993년에는 소비재의 경우 90%를 상회하였고 농부산물과 생산재의 경우도 80%를 상회하게 되었다(〈표 1〉 참조).

또한 중국은 1990년대에 들어 生産要素市場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勞動市場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국가계획에 의한 노동력할당은 일부 특정 인력에 국한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인력은 다양한 형태의 노동시장을 통하여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노동계약제가 확산되어 國有單位의 경우 1995년 말에 정규직원의 40%를 계약직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國有銀行의 상업화개혁 추진과 더불어 다양한 방식으로 資本市場을 육성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국채의 발행과 유통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1990년과 1991년에 上海와 深圳에 株式市場이 개설되었다. 이 두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1996년 9월 말에 446개, 주식시가 총액이 7,835億元(GNP 대비 11.6%)에 이르렀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외에 중국은 각종 物資의 현물 및 선물시장, 재산권 시장, 정보시장 등을 개설하고 관련 법규를 제정하는 등 市場體系의 작용에 필요한 물리적·제도적 기초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2. 所有制의 變化

중국 경제의 개혁과정에서 기업의 소유제도와 관련하여 뚜렷이 부각된 현상으

로 비국유기업의 급속한 성장과 이에 따른 국유기업의 상대적 쇠퇴를 들 수 있다. 중국 경제의 市場化와 對外開放에 수반된 시장경쟁과정에서 국유기업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는 곧 국유부문의 비중하락으로 나타났다. 1978년에 공업총생산액 중 국유부문의 비중은 78%였으며, 성격상 국유기업과 큰 차이가 없는 도시집체기업을 포함할 경우 90%를 상회하였다(〈표 2〉 참조).²⁴⁾ 그러나 개혁이 진행되면서 국유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4년에는 34%에 이르렀고, 도시집체기업을 포함할 경우에도 41%에 불과하게 되었다. 반면 각종 비국유기업의 성장은 뚜렷하여, 1978-1994년 기간중 농촌집체기업인 鄉村企業의 비중이 9.1%에서 30.5%로 증가하였고, 개혁 이전에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던 私企業과 外國人 投資企業이 각각 11.5%와 13.4%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하였다.

또한 상당수의 국유기업은 과다고용, 종업원 및 퇴직자에 대한 과도한 사회보장부담 등으로 인해 고질적인 경영적자를 보이고 있으며,²⁵⁾ 이것이 재정적자와

〈표 2〉 중국 공업생산 소유제 구조의 변화추이

(단위: 億元, %)

구 분	1978년	1985년	1991년	1994년
공업총생산액 (비중 %)	4,237	9,716	28,248	76,909
국유기업	77.6	64.9	52.9	34.1
집체기업	22.4	32.1	35.7	40.9
도시집체기업	13.3	15.9	12.7	7.0
향촌기업	9.1	14.6	21.0	30.5
협동조합형 기업		1.6	2.0	3.4
개체기업*		1.9	5.7	11.5
기타 소유제 기업**		1.2	5.7	13.6

주: *) 이 통계상의 개체기업은 모든 사기업을 포괄하는 것으로 추정됨.

**) 기타 소유제 기업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함.

자료: 『중국통계년감』, 각 년판.

24) 도시집체기업은 개념적으로는 종업원들에 의해 집단적으로 소유되는 기업이지만, 실제로는 지방정부의 해당 산업부서에 의해 통제를 받는 것으로, 도시행정기관, 국유기업, 지역주민 공동체(街道) 등에 의해 설립되어 그 산하에서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도시집체기업은 국유기업에 비해 종업원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 외에는 국유기업과 유사하게 정부통제를 받아 왔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김시중(1993, pp.27-28) 참조.

25) 獨立採算制 國有工業企業 중 적자기업의 비중은 1991년 31.8%, 1994년 41.4%, 1995년 43%이며, 이들의 적자총액은 1994년 483億元, 1995년 541億元으로 발표되었다.

금융부문의 부실채권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되고 있다.²⁶⁾ 이에 따라 중국 지도부는 국유기업 개혁과 금융개혁을 최우선적인 개혁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현재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기본방향은 대형기업의 경우 독립법인으로서의 주식회사화에 있으며, 중소형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 매각, 임대경영, 파산 등 보다 과감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공식입장과는 별도로, 일부 지방 정부는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이며 실질적인 사유화를 추진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유기업 개혁의 진전은 기업 주관부문인 정부기관, 기업경영자, 종업원 등 기득권세력의 저항으로 말미암아 핵심부분에서는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유기업 개혁과 연계하여 金融改革이 추진되고 있는데, 총 대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4대 國有銀行의 商業化와 민간은행의 설립, 외국계 은행의 영업범위 확대 등이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기간중 급속히 성장한 비국유기업이 사기업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현상이다. 물론 개혁 이전에 거의 존재하지 않던 사기업이 1994년에 공업생산액 중 11.5%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한 것 자체가 의미 있는 변화이며, 또한 일부 사기업이 정치·경제적 이유로 집체기업으로 등록하는 등(이른바 假集體 眞私營) 실제 사기업의 비중이 공식통계를 상회하는 측면이 존재한다.²⁷⁾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성장한 비국유기업에서 중추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유제 측면에서 농촌집체기업으로 분류되는 鄉村企業이었다. 鄉鎮企業으로 총칭되는 농촌 비국유기업의 대종을 차지하는 鄉村企業은 형식적으로는 鄉·鎮·村 등 농촌 말단 행정단위 내 주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 지방정부의 지배하에 있는 기업들이다.

개혁기 중국에서 향촌기업이 순수 사기업에 비해 높은 성장을 보인 것은 다음 몇 측면으로 설명된다. 먼저 사기업과 비교할 때 향촌기업은 자금, 인력 등 희소자원을 확보하는 데에 유리하였다. 즉, 자본시장 등 생산요소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사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불비한 상황에서 말단 지방정부의 지원과 보호 아래 있는 향촌기업들이 금융기관들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

26) 중국의 재정적자는 국채 관련 지출을 제외하고도 1994년 574億元, 1995년 582億元에 달하였으며(『中國統計年鑑』, 1996, p.223), 은행들의 총여신 중 부실채권의 비중은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Asian Wall Street, 1997.12.29).

27) 3차산업에서 사기업의 비중은 공업에서의 비중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거나 기술 및 관리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또한 사기업에 대한 각종 불투명한 준조세부과나 정치적 상황변화에 대한 우려도 향촌기업의 상대적 우위를 뒷받침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²⁸⁾

다른 한편 국유기업과 비교할 때, 새로 등장한 향촌기업은²⁹⁾ 기존 국유기업들에 의해 수요가 채워지지 못했던 노동집약적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집중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종업원에 대한 고용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으며, 임금도 기여(성과)와 연계하여 지급할 수 있고 또한 종업원 및 은퇴 종업원에 대한 사회보장적 부담도 작아서, 국유기업과의 시장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또한 내부적으로 국유기업에 비해 硬性豫算制約(hard budget constraint)에 놓여 있었는데, 이는 지방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보호능력이 미약하여 자연히 시장경쟁의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鄉, 鎮, 村 등 말단 지방정부가 일종의 持株會社(holding company)로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行態를 보였다고 평가된다.

3. 分配側面의 變化

중국 개혁기의 분배측면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작업이다. 중국의 소득분배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시·농촌 간, 지역 간(동·중·서부 간, 省間), 지역 내 분배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중국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비금전적 보상의 크기를 추정해야 하는 문제가 수반되기도 한다. 그 동안 중국의 소득분배에 관하여 위의 각 측면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어 왔으며, 이 연구들 간에 부분적으로 상충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일치하는 핵심적인 발견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Khan *et al.*, 1992; Du, 1996; Chen and Fleisher, 1996; Tsui, 1996 참조).

우선 중국의 도시·농촌 간 소득격차는 개혁 이전에 상당히 벌어져 있어서, 1978

28) 지역에 따라 향촌기업이 사기업에 비해 누리는 우위의 정도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溫州(浙江省)나 廣東省 등 사기업에 우호적인 지역이나 향촌정부가 기업을 설립·운영할 만한 재정적 능력이 부족한 낙후지역의 경우에는 향촌기업의 유리한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9) 鄉村企業은 인민공사와 생산대대가 운영하던 社隊企業의 후신이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성장을 주도한 것은 개혁기에 새로 설립된 鄉村企業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년 도시주민의 1인당 평균소득은 농민의 2.4배, 평균소비는 2.9배에 달하여 개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주택, 의료, 교육, 연금 등을 도시주민에 한해 염가로 공급한 것에 기인한 현상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초기개혁이 농산물 교역조건의 개선, 집단농장의 해체 등 농촌부문에 집중된 결과 농업생산성의 상승과 이에 따른 농민의 소득증가가 뚜렷하였고, 이에 따라 도농 간 소득격차가 축소되는 현상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개혁이 도시부문으로 확산되면서, 이 현상이 역전되어 1985년을 기점으로 도농 간 소득격차는 다시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이 추세가 1990년대에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표 3〉 참조). 그 요인으로는 농업의 교역조건 악화, 도시 기업부문의 자율권 확대에 따른 임금상승, 도시에서의 경제활동기회 증가에 따른 새로운 소득원 발생, 악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유지되는 도시·농촌 간 이종구조³⁰⁾ 등이 지적되고 있다.

〈표 3〉 중국 도시·농촌 간 1인당 소득·소비수준 비교

년도	도시주민 1인당 생활비 소득(元)(A)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元)(B)	도시·농촌 간 소득비율(A/B)	도시-농촌 소비비율
1978	316.0	133.6	2.37	2.9
1980	439.0	191.3	2.29	2.8
1982	494.5	270.1	1.83	n/a
1985	685.3	397.6	1.72	2.3
1987	916.0	462.6	1.98	2.6
1989	1,260.7	601.6	2.10	2.8
1990	1,387.3	686.3	2.02	3.0
1991	1,544.0	708.6	2.18	3.0
1992	1,826.1	784.0	2.33	3.4
1993	2,336.5	921.7	2.54	3.5
1994	3,179.2	1,221.0	2.60	3.6
1995	3,892.9	1,595.6	2.44	3.4

자료: 『중국통계년감』, 각 연판

30) 농촌인구의 도시 유입을 제한하는 戶口制度가 유지되고 있어, 도시호구를 갖지 않은 사람은 정규직 취업, 주택, 자녀교육, 의료 등에서 차별을 받는다. 다만 과거와는 달리 식량이 시장을 통해 공급됨에 따라 많은 수의 농촌인력이 도시에 유입되어 각종 임시직 및 건설업 등에 종사하면서 도시저변층을 형성하고 있다.

둘째로, 省間 所得分配의 不平等度를 통해 살펴본 전반적인 지역 간 소득격차의 추이에 대해서는 연구들 간에 다소 상충하는 결과가 얻어지고 있지만,³¹⁾ 이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현상은 연해지방과 내륙지방 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점이다. 이 현상은 연해지방 내 및 내륙지방 내 省間 隔差의 축소와 연해-내륙 간 격차확대라는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면서(Chen and Fleisher, 1996), 점차 후자의 요소가 압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개혁초기에 과거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廣東, 福建 등 華南地方이 對外貿易 및 外資유치의 중심으로 등장하면서 급성장함에 따라 일단 지역 간 소득격차가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이미 발달된 지역인 上海, 江蘇 등 華東地方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華南地方도 고속성장을 지속하였지만 내륙지방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뒤처지면서, 연해-내륙 간 성장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1978년 동부(연해)지방의 1인당 GDP는 전국평균의 139.5%였으나 1993년에는 169.1%로 상승한 반면, 중부지방의 경우는 해당 기간중 93.2%에서 87.4%로 하락하였고, 서부지방의 경우는 76% 수준에 머물러 있다(Du, 1996, p.15).³²⁾³³⁾ 이러한 연해-내륙간 소득격차 확대는 농업과 국유기업 위주의 중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내륙지방이 개혁·개방의 혜택을 충분히 보지 못한 반면, 연해지역은 개혁·개방과 더불어 비교우위를 갖는 경공업과 서비스업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개혁기 중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한 非國有企業이 상대적으로 인구가 밀집되고 市場化의 진전이 빠르며, 해외와의 연계에 편리한 동부연해지방에서 노동집약적 업종을 중심으로 급성장하였고, 유사한 이유로 외국인 투자도 이 지역에 집중되었다는 것이 주요인이 된다. 한편, 개혁기에 지방분권화가 진전되고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이 상대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중앙이 개입하여 지역 간 격차

31) 1인당 GDP(또는 소득) 省間 分布의 분산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또는 지니계수 등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Chen and Fleisher(1996)은 개혁 전기간중 지역 간 소득격차가 축소되는 것을 발견한 반면, Tsui(1996)나 Du(1996)는 개혁초기 지역 간 소득격차가 축소되었다가 1980년대 후반 또는 1990년대 이후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고 있다.

32) 이 통계에서 동부지방은 遼寧, 北京, 天津, 河北, 山東, 江蘇, 上海, 浙江, 福建, 廣東, 廣西 등 11개 省(성급 직할시 및 자치구 포함), 중부지방은 內蒙古, 黑龍江, 吉林, 山西, 安徽, 河南, 湖北, 湖南, 江西 등 9개 省, 서부지방은 新疆, 陝西, 甘肅, 青海, 寧夏, 四川, 貴州, 雲南 등 8개 省(자치구)를 포함하였으며, 海南과 티베트는 제외되었다.

33) 한편, 지역 간 소득의 절대적 격차도 매우 커서 30개 省級 지방 중 1인당 GDP의 최고와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上海와 貴州는 각각 1만 5,204원과 1,553원으로 거의 10대 1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도시인구가 대부분인 3개 직할시를 제외할 경우에도 廣東의 1인당 GDP는 6,380원으로 貴州의 4.1배에 달한다(『中國統計年鑑』 1996, p. 45).

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로, 지역 내 인적소득분배의 변화는 보다 미시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제한된 연구결과와 단편적 관찰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인적 소득분배의 불균등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개혁 이전에 농촌의 집단농장이나 도시의 기업 내에서 실시되던 평균적 분배방식이 소멸 또는 약화되고, 이를 대신하여 농업에서는 경작성과와 소득이 직접 연계되는 가족농 체제가 정착되었고, 기업에서도 성과와 연계한 임금 및 보너스지급이 확산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개혁 이후 농촌과 도시를 막론하고 많은 개인기업 또는 사영기업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자산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한편, 중국의 분배문제와 관련하여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구조적 부정부패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중국의 점진적 개혁이 진행되면서 이중가격의 존재, 시장과 정부역할의 불분명한 분리, 정부재정과 분리된 막대한 규모의 예산외자금의 존재, 재산권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곧 심각한 부패를 초래하여, 1980년대 후반에는 주로 이중가격의 존재에 따른 지대추구 행위가 부정부패의 주원인으로 작용하였고, 1990년대에는 국유기업 개혁 또는 외국인 투자유치과정에서 당·정의 관리 또는 국유기업 경영자가 국유자산을 헐값으로 양도하거나 받으면서 큰 이익을 취하거나 그 과정에서 뇌물을 받는 유형의 부패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부정부패의 확산은 앞에서 살펴본 소득분배 불균등화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동시에 이에 대한 사회의 불만을 악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4. 政府의 介入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개혁기 중국 경제의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정부의 개입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다. 이제는 개혁 이전과 같이 국가가 中央計劃을 통하여 또한 기업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통하여 경제를 조작하던 시기는 지나갔다. 다만, 구체제의 유산이 상당히 남아 있어, 공식·비공식적으로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金融, 雇用 등의 부문에서 정부의 역할은 일반적인 시장경제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즉, 중국은 명시적으로 政策金融을 담당하는 3개의 은행을 갖고 있고, 총신용의 70%를 공급하

는 四大 國有專門銀行도 상업화를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정부의 영향력에서 충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사회적 안정유지차원에서 국유기업의 잉여인원 정리해고나 각종 사회보장성 혜택의 축소·폐지도 조심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개입을 중국의 지속적인 사회주의 속성유지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한 현재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중국 경제에서의 정부역할은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국의 WTO 가입이 가시화되고 그 조건으로 강도높은 자유화계획이 합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있고, 변화의 방향은 뚜렷하게 정부의 개입축소에 있으며, 중국의 개혁추진방향도 이러한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결국 중국도 정부의 역할에 관한 한 과거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한 성격을 띠는 것으로 전망되며, 이것을 중국 경제의 사회주의적 특성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V. 中國 經濟體制의 展望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지난 10여 년간 중국 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에는 그들이 제시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설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중국이 제시한 바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국가계획과 시장의 어정쩡한 결합이 아니라 시장의 자원배분기능을 광범위하게 도입하는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경제의 시장화는 이미 광범위하게 진전되었고, 국가계획은 과거와 같은 명령성 자원배분기능을 거의 상실하였다.

둘째, 생산수단의 소유제와 관련해서는 상충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국유부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으며, 현재도 국유기업의 대규모 적자를 재정 및 금융부문이 부담하고 있는 현상과 부분적인 사유화정책의 추진을 향후 국유부문의 비중이 더욱 하락할 것을 예견하게 한다. 결국 이러한 국유부문의 위축은 공유제 중심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반면 鄉村企業이라는 중국 특유의 農村集體企業의 지속적인 성장은 새로운 유형의 公有企業이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나아가 국유기업의 주식제 개혁의 성공가능성을 미약하나마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시장화가 진전됨에 따라 새로 등장하는 사기업부문이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 1995년 이후 지방차원에서의 중소기업의 사유화가 확산되고 있는 현상, 향촌기업이 사기업에 비해 유리한 여건을 갖게 했던 요인이 점차 약화 또는 소멸해 갈 것이라는 전망 등을 고려한다면, 중국 경제에서 공유품이 지속적으로 중심적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보다 유력하다. 여기서 향촌기업의 유리한 요소들이 약화된다는 것은 전반적인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 자본시장 등 생산요소시장이 형성되어 가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되면서, 향촌기업이 희소자원의 확보 등에서 사기업보다 유리했던 여건이 점차 약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향촌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국유기업과 유사한 연성예산제약이 나타나는 문제도 향촌기업의 지속적 성장가능성을 의문시하게 하는 요인이다.

셋째, 분배측면에서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히 1990년대 이후에 도농간, 연해지역-내륙지역간, 나아가 계층간 분배의 불균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요소는 약화되고 있다. 또한 개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조적 부패문제는 분배의 정당성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러한 현실은 공동부유를 내세우고 있는 중국식 사회주의 이념에 큰 타격을 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실현과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정치적 사회주의와 시장경제간의 양립가능성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공산당의 중앙집권적 독재를 근거로 하는 중국의 정치적 사회주의는 개별 경제주체의 분권화된 의사결정을 근거로 하는 시장경제와 갈등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즉, 완비된 시장경제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제적 이해관계의 형성은 불가피하고, 이는 공산당 일당독재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 이러한 도전이 현실화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근본적으로 중국도 이 문제에 예외가 되지 않는 것일 것이다. 또한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하여 단순히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주의경제의 株主와는 달리 복합적인 동기를 갖는 國家가 자산소유자로서 국유기업에게 독립적인 경영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도록 한다는 구상은 실현가능성이 낮다(Komai, 1993, pp.48-51; 조원희, 1997, p.39).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향후 중국의 경제체제를 전망해 볼 때, 목표모형으로 제

시되고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물론 중국에는 공산당 통치의 견고성, 공산당 주도의 효과적인 개혁·개방정책 실시, 높은 수준의 국유부문 비중과 국유기업 개혁의 제한적인 성과, 독특한 유형의 농촌집체기업의 지속적 성장 등 사회주의 시장경제 수립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가 존재한다. 그러나 시장화의 진전에 수반하여 나타나는 국유부문의 쇠락, 농촌집체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어렵게 하는 여건변화, 분배의 양극화 심화추세, 그리고 공산당 일당통치와 시장경제와의 갈등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주의적 요소들이 장기적으로 존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모형의 실현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전망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장기적인 중국의 체제변화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인 모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중국의 경제체제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에 대한 추측(speculation)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제시할 수 있다. 먼저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중국이 결국 일반적인 시장경제의 하나로 귀착되는 것이다. 물론 중국 경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또는 궁극적으로도 전형적인 시장경제와는 구별되는 중국적 특성을 보유하겠지만, 이것이 독특한 경제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 다른 시나리오로서 공산당 및 각급 정부의 관리가 명목적 국유자산의 실질적 소유자로 등장하며 자산총을 형성하는 일종의 국가자본주의의 등장을 상정할 수 있다. 이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패현상과 같은 중국 개혁과정의 부작용이 극대화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시나리오이며, 1930-1940년대 국민당 정권 시기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하겠다.

參 考 文 獻

1. 고정식, 『중국의 가격개혁과 시장화의 진전』, 산업연구원, 1997.
2. 김시중, 『중국 국영기업 개혁의 전개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3. 김익수, “중국식 사회주의시장경제: 특성, 한계 및 향후 전망”, 『비교경제연구』, 통권 제5호, 1997, pp. 323-365.
4. 조영철, “기업소유권과 노동자관리기업”, 『경제학연구』, 제45집 제3호, 1997, pp. 153-186.
5. 조원희, “개혁사회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시장사회주의 모형연구”, 『비교경제

- 연구』, 통권 제5호, 1997, pp. 31-56.
6. 馬洪(主編), 『甚麼是社會主義市場經濟』, 中國發展出版社, 1993.
 7. 中共中央關於建立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若干問題的決定(원문과 번역문은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중국공산당 14기 3중전회 결정과 鄧小平의 남순강화, 1993. 12 참조).
 8. 中國社會科學院 經濟研究所, “社會主義市場經濟” 課題組, “現代市場經濟的不同類型與我國的社會主義市場經濟”, 『經濟研究』, 1996. 6, pp. 9-15.
 9. Bardhan, P. and J.E. Roemer, “Market Socialism: A Case for Rejuven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992, pp.101-116.
 10. _____ eds., *Market Socialism: The Current Debate*,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11. _____, “On the Workability of Market Socialism”,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8, No. 2, 1994, pp. 177-181.
 12. Barone, E., “The Ministry of Production in the Collectivist State”, in F.A. Hayek ed., *Collectivist Economic Planning* pp. 245-290 (original published in 1908).
 13. Chen, J. and B.M. Fleisher, “Regional Income Inequality and Economic Growth in China”,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1996, pp. 141-164.
 14. Du, Jin, “Regional Inequality Variations in Post-Reform China”,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workshop at Hitotsubashi Univ., Tokyo, Japan*, 1996.
 15. Estrin, S., “Workers’ Cooperatives: Their Merits and their Limitations,” in Le Grand and Estrin eds. 1989, pp. 165-192.
 16. Estrin, S. and D. Winter, “Planning in a Market Socialist Economy”, in Le Grand and Estrin eds., 1989, pp. 100-138.
 17. Hayek, F.A., “Socialist Calculation: The Competitive ‘Solution’”, *Economica*, 1940, pp. 125-149.
 18. Khan, A. R., K. Griffin, C. Riskin and R. Zhao, “Household Income and Its Distribution in China”, *China Quarterly*, 1992, pp. 1029-1061.

19. Kim, Si Joong, "Trajectory of China's Socialist Economy",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eminar on Future of China*, 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May 1997.
20. Kornai, J., "Market Socialism Revisited", in Bardhan and Roemer eds., 1993, pp. 42-68
21. Lange, O., "On the Economic Theory of Socialism", in B. E. Lippincott ed., *On the Economic Theory of Socialism*,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38.
22. Le Grand, J. and S. Estrin eds., *Market Socialism*, Clarendon Press, Oxford, 1989.
23. Mises, L. von, "Economic Calculations in the Socialist Commonwealth", in F.A. Hayek ed., *Collectivist Economic Planning*, pp. 87-130 (original published in 1920).
24. Naughton, B., *Growing out of the Plan: Chinese Economic Reform 1978-1993*, 1995, Cambridge University Press.
25. Putterman, L., "The Role of Ownership and Property rights in China's Economic Transition", *China Quarterly*, Dec.1995, No.144, pp.1047-1064.
26. Roemer, "Can There Be Socialism after Communism?", in Bardhan and Roemer eds., 1993, pp. 89-107.
27. Sachs, J. and W. Woo, "Structural Factors in the Economic Reforms of China, Eastern Europe and the Former Soviet Union", *Economic Policy*, Apr. 1994, pp. 101-145.
28. Shleifer, A. and R.W. Vishny, "The Politics of Market Socialism",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8 No.2, 1994, pp. 165-176.
29. Tsui, K., "Economic Reform and Interprovincial Inequalities in China",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1996, pp. 353-368.
30. Yang Shiwang, *et al.*, "Notes on a Discussion of the Theory of a Socialist Market Economy", *Social Science in China*, Autumn 1995, pp. 29-47.